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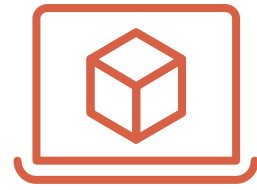
일 잘하는 정부,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

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

2022.7.26.(화)

01

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



선제적 · 맞춤형 서비스

1. 원사이트 토털서비스
2. 마이 AI 서비스
3. Any-ID 간편로그인 서비스 제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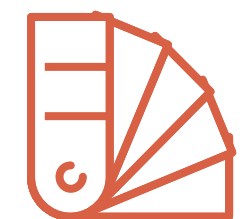
과학적 국정운영

1. 쏠부처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
2. 온라인 종합상황실 운영
3. 스마트업무환경 조성



혁신생태계 조성

정부는 공공서비스 ·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→ 기업은 혁신서비스 창출
→ 국민은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공공서비스 이용



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

1.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
2.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

01

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

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(8월)

-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
-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과제 20개 집중 관리

편안한 국민을 위한 과제

- 디지털지갑에 신분증·고지서·지원금까지(행안부, 과기부)
- 실손보험 간편 청구(복지부, 금융위)
- 청약 정보 통합조회·신청(국토부) ... 등

혁신하는 기업을 위한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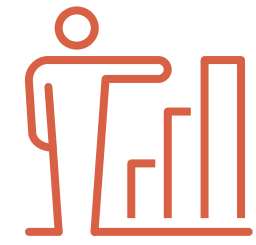
-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, 창업 등에 활용(중기부, 행안부 등)
- 스마트 주소로 AI 로봇 배송(행안부)
- 소상공인 등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(중기부, 과기부) ... 등

과학적인 정부를 위한 과제

- 국민 정책제안 플랫폼(행안부, 권익위)
- 데이터 분석으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(복지부) ...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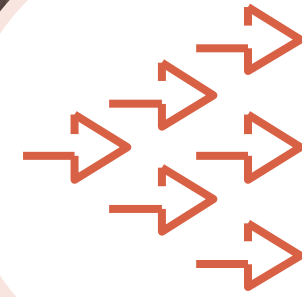
02

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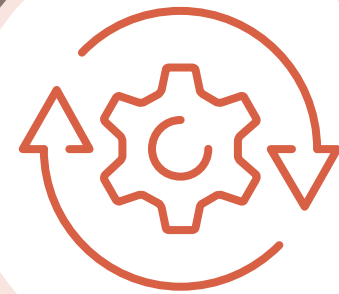
국가공무원 효율화

-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 실시(7~9월)
- 통합활용정원제* 도입, 공무원 정원 동결
- * 매년 부처별 정원의 1% 감축, 그 범위 내에서 필요부처에 재배치



지방공무원 효율화

-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 실시 → 조직 및 인력 효율화
- 지자체별 공무원 정원의 1%를 재배치 목표로 관리
- 기준인력 동결



위원회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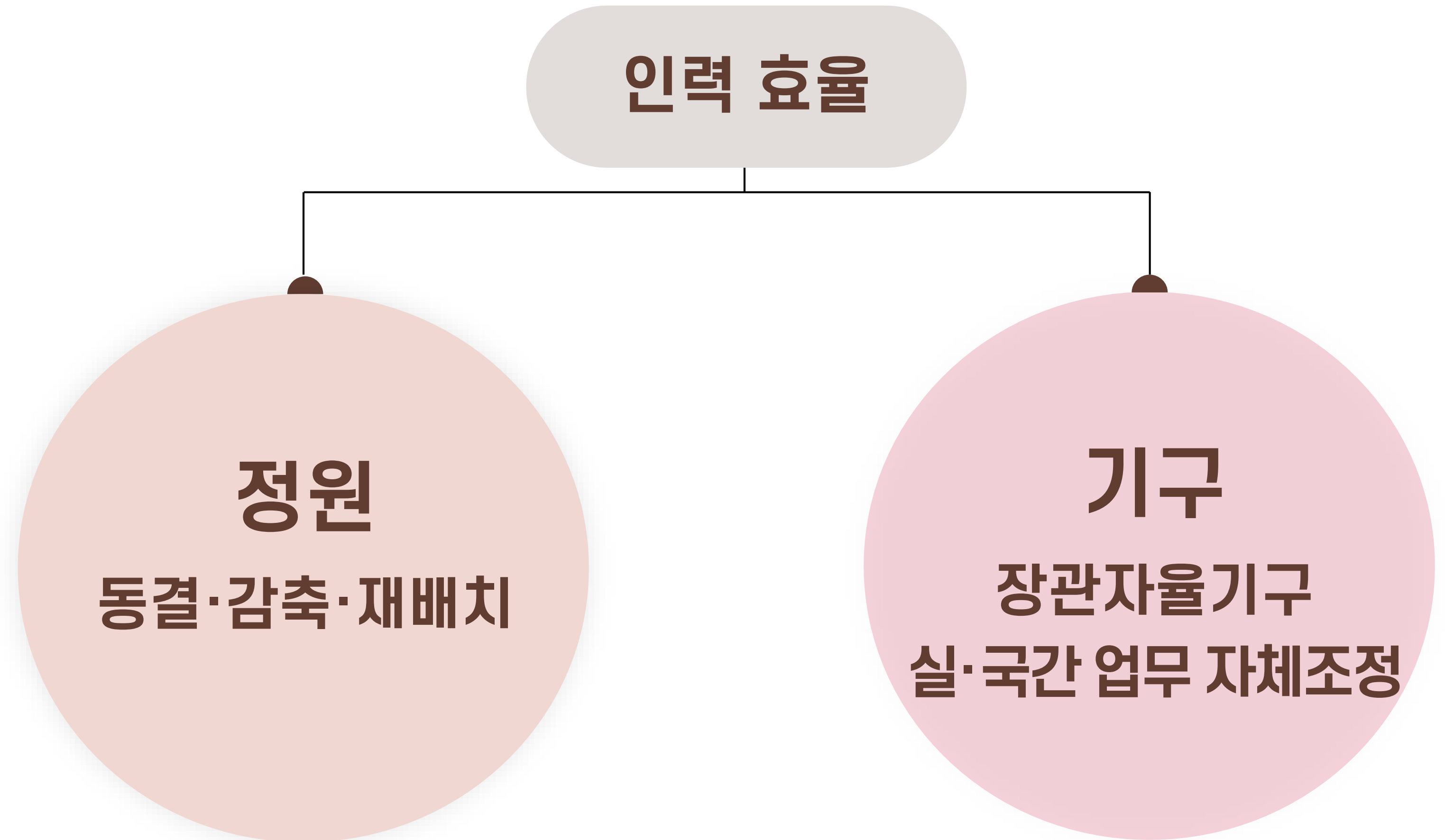
- 정부위원회 30~50% (200~300개) 정비
- 지자체위원회 30% (3,000개) 정비

02

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

정부인력 효율화

- 공무원 인력은 동결하되, 일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운영의 자율성 부여



03

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



인구감소 지역의 자생력 강화

- 기업의 지방 이전 · 육성 지원체계 구축
- 지방소멸대응기금(年 1조원) 지역별 차등지원
-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



지역주도 특화발전 기반 조성

- 규제 권한(산업·관광 등) 지방이양 확대
- 특별자치시·도(세종, 강원, 제주) 특례·지원 강화



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방재정 역량 강화

- 교부세 법정률 검토,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
-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강화,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 책임성 강화



(가칭) 지방시대위원회 설치

- 자치분권위원회 + 균형발전위원회 통합 → 총괄기능 부여, 조정력 강화

03

공정한 기회를
누리는 진정한
지방시대 구현

(가칭) 지방시대위원회 설치

-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총괄 추진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
- 조정력 강화, 총괄기능 부여

자치분권
위원회

+

균형발전
위원회



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·안전관리 혁신



과학적 재난대응

-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
-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마련



선제적 안전관리

- 국민 참여기반의 안전대전환 추진
 - 안전신고, 안전캠페인, 취약지역 집중안전점검 연계·통합실시
- 민방위 교육·복제, 안전한국훈련 개선 등 실전역량 제고



수요자 중심 관리

-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전환
-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등 재난피해자를 고려한 제도개선

재난피해자를 고려한 실질적 제도개선

※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

- (재난지원금) 주택 전파 피해자를 위한 **주택복구비 상향**
- (특별재난지역) 피해산출기초에 **농작물, 가축 등 피해액 포함**
- (재난임의보험) 소규모 식당 **재난희망보험 도입**

민방위 복제 개선

문제점

현장 활용성 부족
(방수, 난연 등 기능성 취약)

개선

**비상근무용과 재난현장 활동용으로
구분하여 활용성, 기능성 제고**

04

국민안전
패러다임 전환으로
재난·안전관리 혁신



05

경찰 운영의 정상화로

민주 · 효율성 제고



경찰국 신설 (8.2.)

- 법률에 명시된 장관의 권한 행사 지원
 -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
 -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



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

- 일반출신 고위직 확대, 복수직급제 도입, 공안직 수준 보수상향, 인력 보강, 교육훈련 강화 등



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(8월 중)

-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
- 경찰제도의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(6개월 내)
 - (안건 예시) 사법 · 행정경찰 구분, 경찰대 개혁, 자치경찰제 개선 등

05

경찰 운영의

정상화로

민주 · 효율성 제고

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

· 일반출신 고위직 확대, 복수직급제 도입, 공안직 수준 보수상향, 인력 보강, 교육훈련 강화 등

인사

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을 20%로 확대 추진
복수직급제 도입, 승진심사기준 개정(10월) 등

보수

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을 위한 협의체 운영(8월~)
(구성) 행안부 · 기재부 · 인사처 · 경찰청 / '24년 예산안 반영 목표

인력

민생 경제범죄 관련 경제팀 · 사이버팀 인력 보강,
군사경찰 사건 이관에 따른 인력 충원

교육

수사연수원 교육동 증축(~'26년) 및 수사관련 학과 신설,
대학, 로스쿨 등 교육훈련 확대방안 마련

06

지방규제 혁신: 새정부 규제혁신방향을 지역 현장에도 안착



중앙규제 발굴·개선

현장 의견 적극 수렴 → 행안부와 개선안 도출
→ 부처협의 → 수용률 제고



자체규제 정비

- 주민 생활 밀접한 규제 발굴·개선
 - 조례·규칙, 유사규제(그림자규제), 행태규제 등



행안부 - 지자체 TF 운영

- 지역현장 규제혁신 토론회

07

지방공공기관 혁신 : 과감한 경영개선으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



구조개혁 추진

- 유사·중복기관 조정, 민간부문 경합사업 정비
- 우수 혁신사례에 전폭적인 인센티브 부여



재무건전성 강화

- 부채중점관리기관 집중관리
- 건전화 계획 수립



민간·공공기관 협력 강화

- 지방공공기관의 정보·자원을 민간에 대폭 개방
-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 위한 민·관지원체계 구축



관리체계 개편

- 설립·운영·해산까지 관리강화
- 인사·보수 등을 직무·성과 중심으로 전환

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

일 잘하는 정부,
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

